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리뷰

2022.12.(제7호)

돌봄과 일, 모두 어려운 다자녀 가구 : 현황과 정책 방향*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아동보육정책팀

[재단의 관련 분야 연구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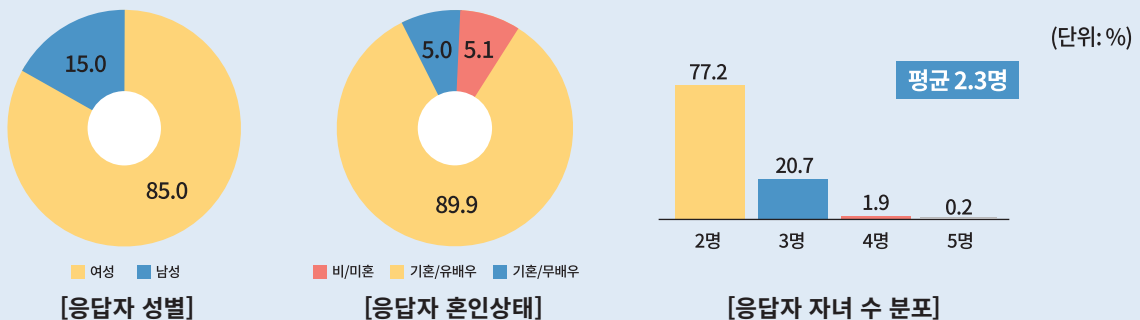
- 서울시 공무원 자녀양육·돌봄 실태조사(2018)
- 서울시 성평등 가족문화 지원방안 연구(2019)
- 비대면사회 가족 내 돌봄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2021)
- 서울형 저출생 대응 정책과제 개발 연구(2022)
- 서울시 양육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2022)

저출생은 종종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고된 현실의 결과로 지목된다. 그러나 모든 양육 가구가 같은 정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정책적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 지원의 실효성과 불충분성,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낮은 체감도 문제¹⁾ 또한 이를 방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 인식 하에 서울시는 2020년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를 명문화하였으며, 2022년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 과제」 연구를 통해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자 하였다.

이번 호 여성가족정책 리뷰에서는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돌봄과 일 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조사 결과,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돌봄 부담이 늘어나지만 가족 내 분담은 원활하지 않아, 돌봄 책임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그리고 이는 여성 양육자의 일자리 유지 어려움으로 이어졌다. 자녀 수가 많을수록 여성의 이직 횟수가 증가하고 임금은 감소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또한, 돌봄과 교육 서비스의 민간 의존도가 높아 양육과 교육비용 부담도 컸다. 이런 상황에서 다자녀 양육은 개인과 가족만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다자녀 양육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서울시 다자녀 가구 설문조사 개요

- 조사 대상 : 서울시 다자녀 가구 양육자/총 1,005명(자치구, 양육자 성별, 자녀 수 할당)
18세 이하의 자녀를 1명 이상 포함하여 자녀가 2명 이상인 양육자
- 조사 방법 및 조사 기간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2022년 4월 27일~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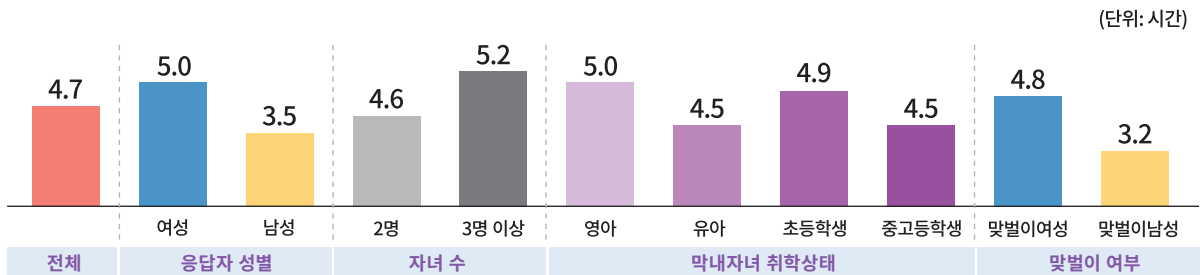


* 이 자료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수행한 『서울시 다자녀 가구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강은애·남이혜, 2022) 연구의 일부임.

1) 최효미·박은정·엄지원, 2020,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다자녀 가구, 돌봄 시간은 길지만 돌봄 부담은 어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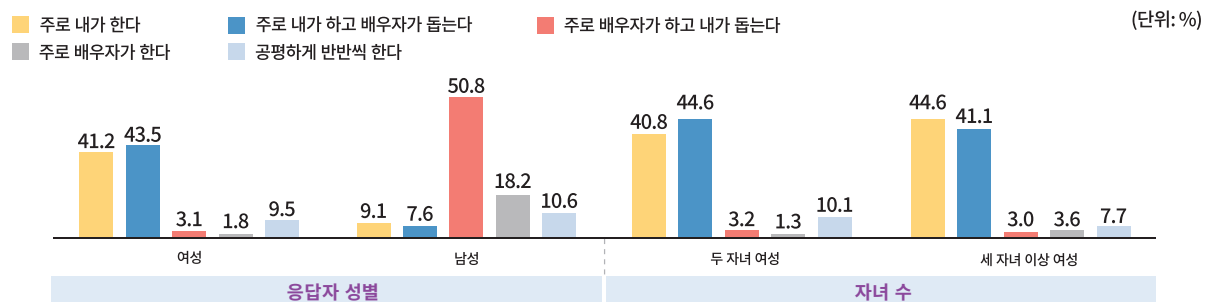
- 다자녀 양육자의 자녀 돌봄 시간은 하루 평균 4.7시간으로, 여성이 더 오래 돌보며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 시간이 길어
 - 평일 기준으로, 여성은 하루 평균 5.0시간, 남성은 3.5시간 자녀를 돌보며,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 시간은 더 소요됨.
 - 0~3세의 영아 돌봄 시간이 5.0시간으로 가장 길고, 초등학생 돌봄 시간도 4.9시간으로 길게 나타남. 이는 돌봄 기관 이용이 용이한 유아 및 중고등학생에 비해 영아와 초등학생 시기에 양육자의 집중적인 돌봄이 이루어짐을 의미함.
 - 맞벌이 다자녀 가구 여성도 남성보다 1.5배 더 오래 자녀를 돌봐(여성 4.8시간, 남성 3.2시간), 다자녀 가구 여성 양육자의 이중부담이 큼.



[하루 평균 자녀 돌봄 시간(평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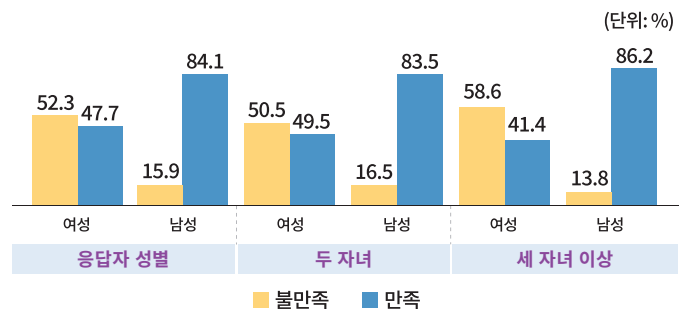
○ 자녀수가 많을수록 배우자와 자녀 돌봄을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는 응답 감소

- 여성의 41.2%는 주로 본인이 자녀를 돌보며, 43.5%는 주로 본인이 돌보고 배우자가 돕는다고 응답한 반면, 남성은 9.1%만이 주로 본인이 돌보고, 50.8%는 주로 배우자가 돌보고 본인이 돕는다고 응답함.
- 자녀 돌봄을 '공평하게 반반씩 한다'는 응답은 여성의 9.5%, 남성의 10.6%로 낮게 나타남.
- 자녀를 주로 돌보는 여성의 응답을 자녀 수로 나누어 보면, 자녀가 많을수록 배우자와의 부담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이 나타남.



[자녀 돌봄 부담 방식(유배우자)]

- 배우자와의 자녀 돌봄 부담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여성 47.7%, 남성 84.1%로 성별 격차가 매우 큼.
- 자녀가 많을수록 공평한 돌봄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과 맞물려, 여성의 돌봄 부담 만족도는 두 자녀 일 때 49.5%, 세 자녀 이상일 때 41.4%로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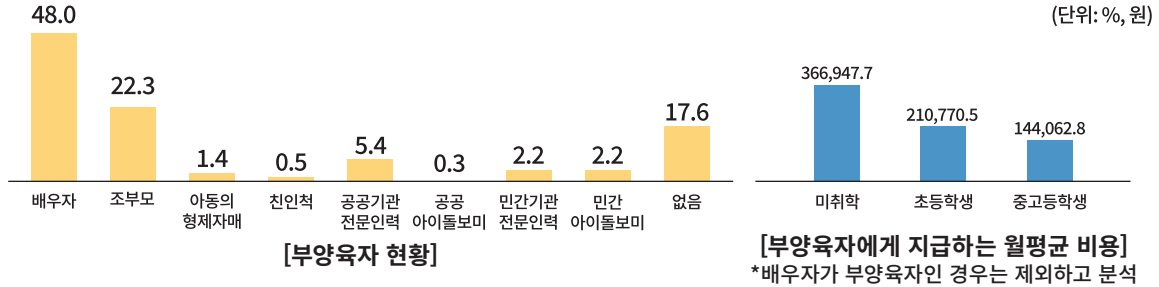


[배우자와의 돌봄 부담에 관한 생각(유배우자)]

돌봄과 일, 모두 어려운 다자녀 가구: 현황과 정책 방향

○ 공공돌봄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한 가족 내 돌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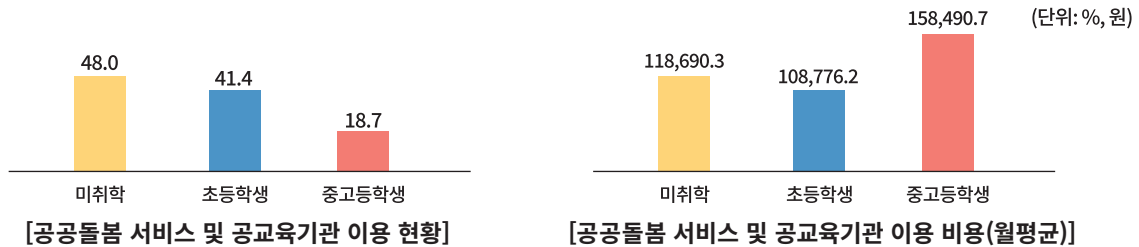
- 부양육자²⁾의 48.0%는 '배우자', 22.3%는 '조부모', '없다'라는 응답은 17.6%임.³⁾
- 부양육자는 공공기관 전문인력이 5.4%, 민간기관 전문인력과 민간 아이돌보미가 각각 2.2%로 나타남.⁴⁾
- 부양육자에게 지급하는 돌봄비용은 자녀가 미취학일 때 월평균 약 37만 원으로 가장 큼. 자녀가 어릴수록 돌봄 지원이 더 많이 요구되어 지급하는 비용이 가장 큰 것으로 이해됨.



돌봄과 교육의 높은 민간의존도, 큰 비용도 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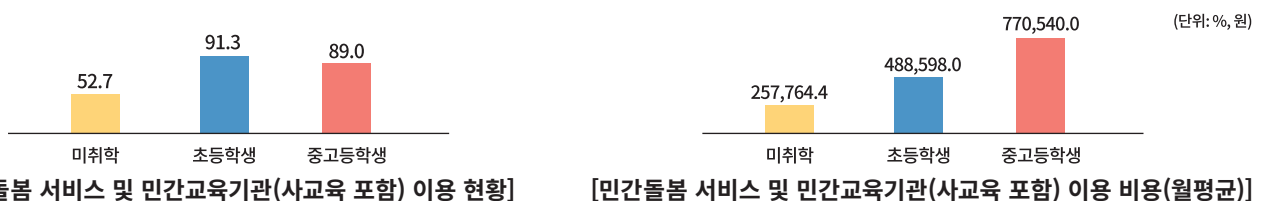
○ 자녀 돌봄을 위해 공공돌봄 서비스나 공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비율은 과반에 못 미쳐

- *공공돌봄 서비스: 국공립 어린이집,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지역아동센터, 우리동네키움센터 등
- *공교육기관: 국공립유치원, 방과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초·중·고의 경우, 방과후 돌봄을 의미함)
- 다자녀 가구 미취학 자녀의 48.0%, 초등학생 자녀의 41.4%, 중고등학생 자녀의 18.7%가 공공돌봄 서비스나 공교육기관을 이용하고 있음.
- 월평균 이용 비용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약 16만 원으로 가장 큼.



○ 민간돌봄 서비스 및 민간교육기관(사교육 포함) 이용률은 공공돌봄이나 공교육기관보다 높아,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져

- *민간돌봄 서비스: 민간 어린이집, 민간 육아도우미 등
- *민간교육기관: 사립유치원, 교과목 및 예체능 학원, 개인 교습 등
- 다자녀 가구 미취학 자녀의 52.7%, 초등학생 자녀의 91.3%, 중고등학생 자녀의 89.0%가 민간돌봄 서비스나 민간교육기관(사교육 포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이용 비용은 중고등학생 자녀가 약 77만 원으로 가장 큼. 이는 전국 평균⁵⁾을 상회하여, 서울시의 높은 교육비용을 반영하고 있음.



2) 본 연구에서는 부양육자를 주양육자 이외에 자녀를 가장 오랜 시간 돌보는 사람으로 정의함.

3) 부양육자가 없다고 응답한 양육자의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41.7%, 초등학생인 경우는 45.8%, 미취학인 경우는 12.5%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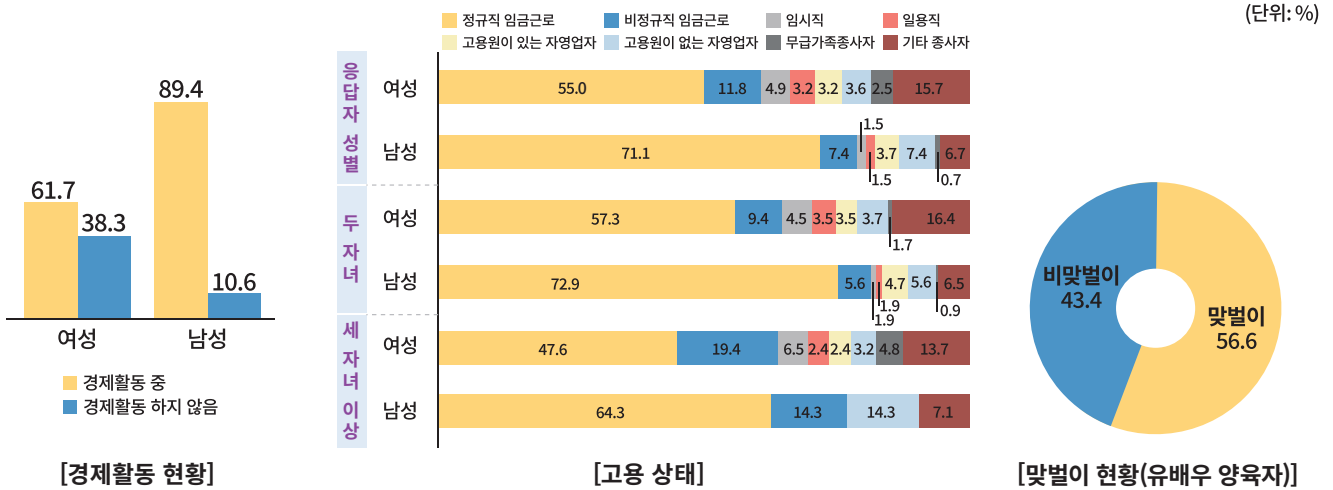
4) 공공기관 전문인력은 국공립 어린이집, 방과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의 교사, 민간기관 전문인력은 학원, 사설 돌봄 기관 등의 교사를 의미함.

5) 통계청·교육부(2021)의 「초·중·고사교육비조사」에 따르면 사교육에 참여 중인 전국 평균 중학생의 1인당 사교육 비용은 535,000원, 고등학생은 1인당 649,000원으로 조사됨.

다자녀 양육자의 일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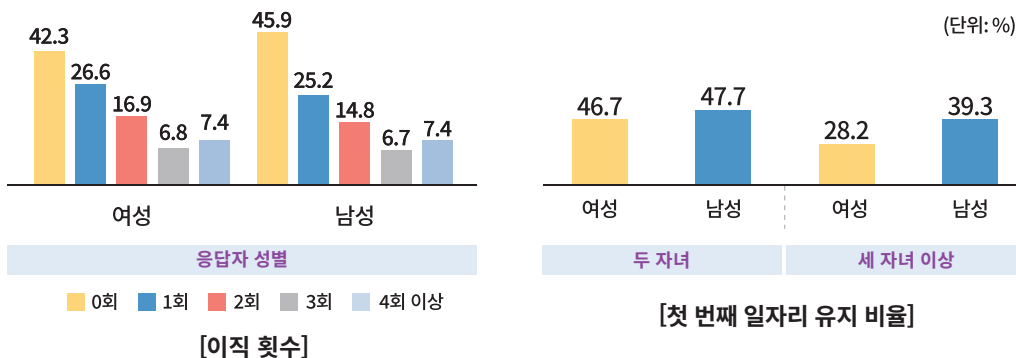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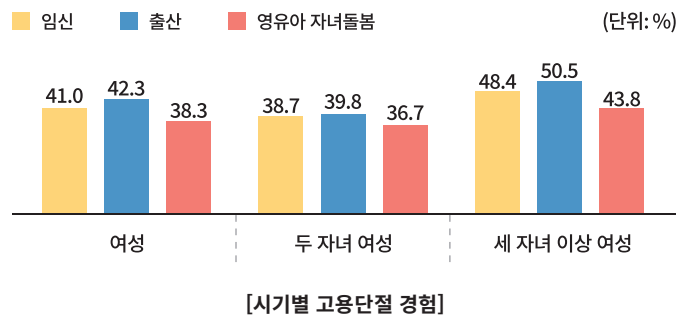
○ 다자녀 양육자 세 명 중 두 명은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 형태의 성별 차이가 커

- 경제활동 중인 양육자는 여성의 61.7%, 남성의 38.3%로 성별 격차가 큼(27.7%p).
- 여성의 55.0%, 남성의 71.1%가 정규직 임금근로자로 남성의 일자리가 보다 안정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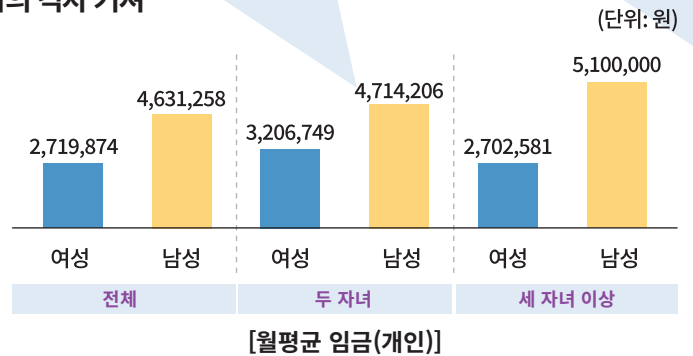
○ 다자녀 가구 여성 양육자, 자녀가 많을수록 고용단절과 이직 경험 증가

- 여성의 41.0%가 임신, 42.3%가 출산, 38.3%가 영유아 자녀 돌봄으로 인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음. 자녀 수의 증가는 임신, 출산, 영유아 자녀 돌봄 시기의 고용 단절 경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자녀 양육 이후의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여성의 26.6%, 남성의 25.2%가 1회 이직했다고 응답하여 성별에 따른 큰 차이가 없었으나, 자녀 수에 따른 이직 횟수의 성별 차이가 컸음.
- 첫째 자녀 양육 후에도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여성은 자녀가 2명인 경우 46.7%,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28.2%로 두 자녀 응답자와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차이가 18.5%p로 컸음. 그러나 남성이 첫 번째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응답은 자녀가 2명인 경우 47.7%,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39.3%로 두 자녀 응답자와 세 자녀 이상 응답자의 차이가 8.4%p로 여성보다 작았음.



○ 자녀가 많을수록 여성 양육자의 임금이 낮고, 남성 양육자와의 격차 커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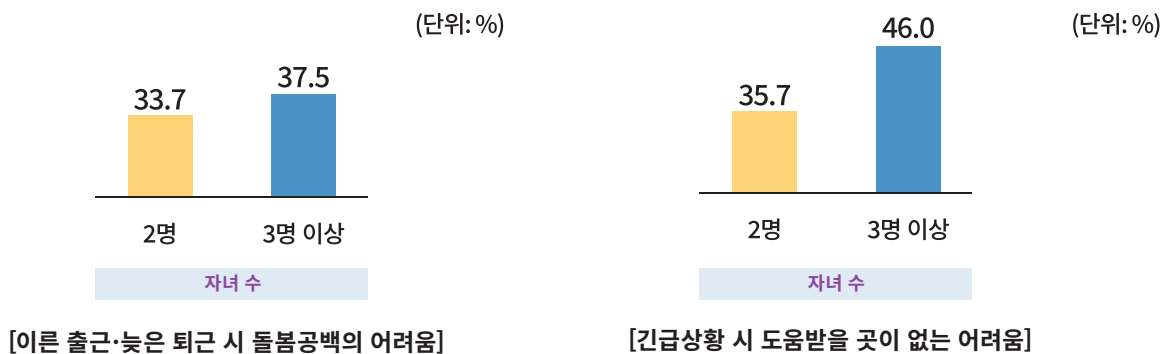
- 월평균 임금이 여성 약 272만 원, 남성 약 463만 원으로 격차가 큰 가운데, 여성은 자녀가 많을수록 임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남. 반면, 남성은 두 자녀보다 세 자녀 이상인 경우 임금이 더 높게 나타남.
- 이러한 결과는 여성 양육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의 어려움, 고용단절 경험 등이 자녀 수 증가와 함께 누적 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음.



다자녀 양육자의 일과 돌봄 병행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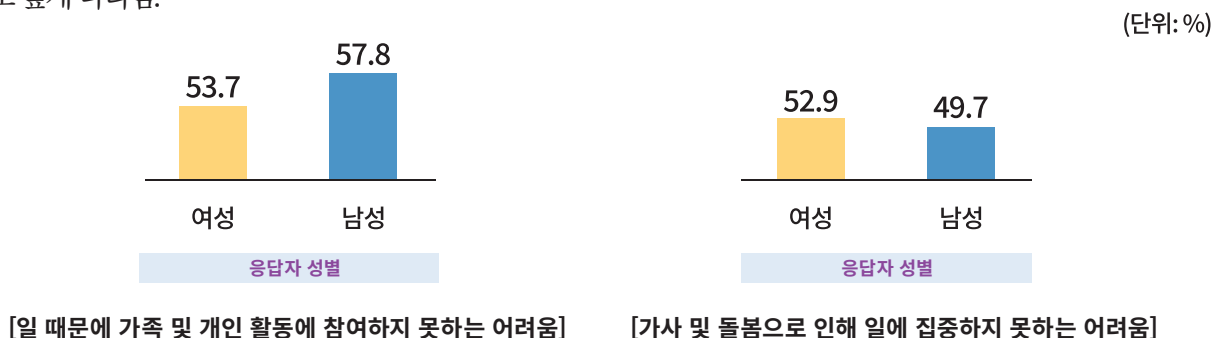
○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

- 두 자녀 양육자의 33.7%, 세 자녀 이상 양육자의 37.5%가 이른 출근이나 퇴근 시 돌봄공백의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아이가 아픈 등의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는 어려움은 두 자녀 양육자의 35.7%, 세 자녀 이상 양육자의 46.0%가 경험한다고 응답함.
- 자녀가 많을수록 돌봄공백 지원 및 긴급돌봄 서비스에 대한 큰 수요로 이어지므로 다자녀 양육 지원 정책에서 자녀 수에 따른 맞춤 정책 개발 필요성을 시사함.



○ 일로 인한 가족 및 개인 활동의 어려움은 남성이, 가사 및 돌봄으로 인한 일의 어려움은 여성이 더 많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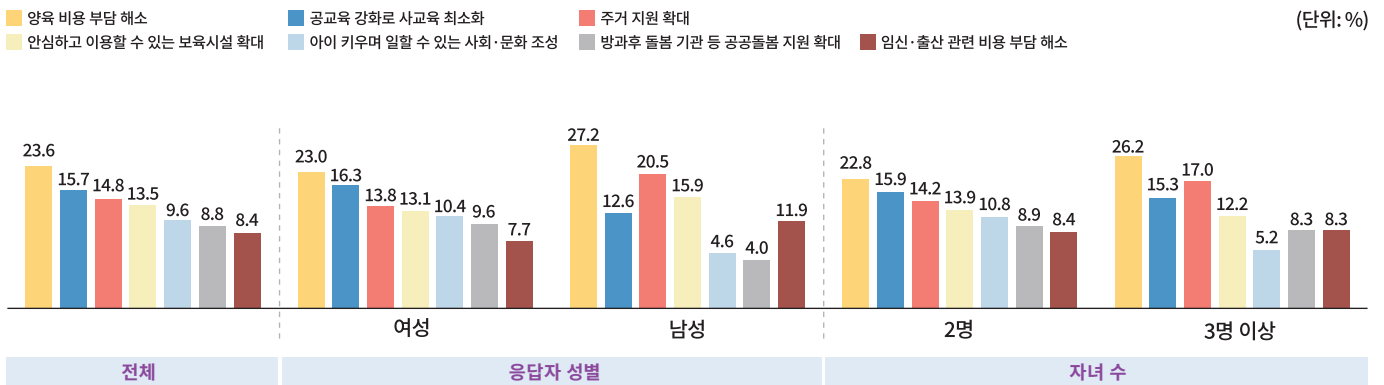
- 남성의 57.8%가 일로 인해서 가족 및 개인 활동을 하지 못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여성 53.7%).
- 반면, 가사나 돌봄으로 인해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응답은 여성 52.9%, 남성 49.7%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남.



다자녀 가구가 살기 좋은 서울시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은?

○ 자녀 양육 비용과 교육 비용 완화를 위한 정책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

- 양육 비용 부담 해소가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23.6%,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최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15.7%로 나타남.
- 주거 지원 확대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보육시설 확대 요구도 각각 14.8%, 13.5%로 나타남.
- 여성 양육자는 남성 양육자에 비해 공교육 강화와 아이를 키우며 일할 수 있는 사회·문화 조성, 공공돌봄 지원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며, 남성 양육자는 여성 양육자에 비해 양육 비용 부담 해소, 주거 지원 확대와 임신·출산 관련 비용 부담 해소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자녀 수가 3명 이상인 양육자의 경우, 주거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자녀 가구보다 높아,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양육 및 교육 비용 증가뿐 아니라, 주거 비용 증가도 다자녀 가구의 큰 부담임을 보여줌.



*응답률 3% 미만은 표시하지 않음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

서울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

실태조사 함의	정책 방향	정책 과제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돌봄시간 증가 - 자녀가 어릴수록 큰 돌봄 비용 부담	공공돌봄 서비스 확대	공공돌봄서비스의 자녀 수에 따른 집중지원 및 자격 완화 검토 (예: 공공아이돌보미 이용 자격 기준 완화,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 검토 등)
- 민간 교육기관에 대한 높은 의존도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교육 비용 부담	교육 분야의 공적 서비스 확대	서울시 공적 교육 서비스의 이용 대상 확대로 다자녀 가구의 교육 비용 부담 완화 (예: 다자녀 가구의 경우 '서울런' 이용 조건 완화* 등)
-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이직 증가 - 여성의 높은 이직률, 고용 단절, 임금 하락	고용 단절 예방과 일자리 질 보장	일-생활균형 지원제도 강화, 자녀 수를 고려한 정책 적용 개선 (예: 자녀수를 고려하여 육아기 단축근로 확대, 가족돌봄휴가 기간 산정 등)
- 여성과 가족, 민간에 의존한 다자녀 돌봄	함께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 양육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서울형 양육지원 정책 수립

*서울런은 서울시 거주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학교밖 청소년,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음. 다자녀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요건을 완화하여, 차상위계층이 아니어도 이용가능하게 확대 검토 필요